

공교회성의 위기와 문서선교의 미래: 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논란을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 보고서

1. 서론: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거버넌스 위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연합기관'은 개별 교단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복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성스러운 그릇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이하 서회)를 둘러싼 사유화 논란은 이러한 공교회(Public Church)적 신뢰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서진한 현 사장의 3연임과 더불어 신설이 시도되었던 '상임이사' 제도는 단순한 인사 행정의 문제를 넘어, 130년 역사를 지닌 공적 자산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소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¹

본 보고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서회 사유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1890년 설립 당시의 숭고한 근본 취지와 현재의 경영 행태를 대조 분석한다. 특히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성경 및 찬송가 출판권과 관련된 경제적 이권 개입 문제를 추적하고, 서회의 간판 매체인 《기독교사상》의 편집 방향성이 공교회와의 관계 설정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나아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연합기관의 모델과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하며, 문서선교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적 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2. 사유화 논란의 구조적 본질과 쟁점 분석

현재 서회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공공성의 상실'과 '지배구조의 기형화'로 요약된다. 이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 온 정관 개정과 이사회 구성의 변화가 낳은 필연적 결과로 분석된다.

2.1. 상임이사 제도 신설과 3연임 체제의 문제점

논란의 발단은 서진한 사장의 장기 집권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서 사장은 4년 임기의 사장직을 두 번 연임하고 현재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에큐메니컬 기관의 수장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다양한 교단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단임 혹은 1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이 관례이자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서회 경영진은 서 사장의 임기 종료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관 개정을 시도했다.²

가장 치명적인 쟁점은 '상임이사' 제도의 도입 시도다. 2023년 3월 추진된 정관 개정안은 사장이 상임이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하거나, 퇴임 후에도 상임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는 사장과 달리 정년이나 연임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종신 집권'을 위한 우회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¹ 이는

공교회가 파송한 이사들의 견제를 무력화하고, 특정 개인이 기관을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Corporate Raiding)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 이사회 구성의 변질: 교단 파송 이사의 축소

서회의 사유화가 가능해진 구조적 배경에는 2015년 단행된 정관 개정이 자리 잡고 있다. 본래 서회의 이사회는 각 회원 교단이 파송한 '교단 대표 이사'가 주축을 이루어, 교단의 총의가 서회 경영에 반영되는 구조였다. 이는 서회가 특정인의 것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구분	2015년 개정 전	2015년 개정 후	증감	함의
교단 파송 이사	11명	7명	-4명	교단(공교회)의 관리 감독 기능 약화
회원 대표 이사	8명	12명	+4명	이사의 자체 재생산 구조 강화 (카르텔화 가능성)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개정으로 인해 교단 파송 이사는 11명에서 7명으로 대폭 축소된 반면,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회원 대표 이사는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다.² 더구나 회원 대표 이사 12명 중 11명이 은퇴 목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 은퇴 목사들은 현직 총회장이나 교단 실무자들에 비해 교단의 정치적 견제로부터 자유로우며, 현 경영진과의 개인적 유대 관계나 이권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책위는 이러한 인적 구성이 서 사장의 3연임과 상임이사 제도 도입 시도를 가능하게 한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2.3. 재정 건전성 및 배임 의혹

사유화의 징후는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대책위는 정지강 전 사장(명예사장)에게 퇴임 후 6년간 약 4억 5천만 원의 급여와 전용 차량, 유류비 등을 지급한 것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³ 이에 대해 서회 측은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특별 용역비"라고 해명했으나, 이사회 의결 절차의 투명성과 용역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⁴

또한, 서진한 사장 취임 이후 발생한 고가의 사택 매입 의혹과 판공비 유용 의혹 등은 서회의 재정이 공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일부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으나⁵, 에큐메니컬 기관이 비영리 법인의 재정을 기업 오너의 쌈짓돈처럼 운용했다는 윤리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이는 '가난한 자를 위한 문서 선교'라는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만 경영의 전형이다.

3. 설립 정신의 재조명: 조선성교서회의 근본 취지

서회의 현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되는 1890년 '조선성교서회(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의 설립 정신을 복기해야 한다.

3.1. 선교와 계몽을 위한 순수 연합체

1890년 6월, 미국 감리교 선교사 프랭클린 올링거(F. Ohlinger)를 초대 회장으로 하여 설립된 조선성교서회는 교파를 초월한 연합기관으로 출발했다.⁶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개별 교단의 확장을 넘어, 조선 민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대적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출판이라는 도구가 필수적임을 공감했다.

- 초교파적 협력: 설립 초기부터 서회는 특정 교단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감리교, 장로교 등 다양한 배경의 선교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협력선교(Comity)의 모델을 제시했다.
- 비영리 공공성: 서회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었다. 초기 간행물인 《성교촬요》, 《천로역정》, 《찬미가》 등은 조선의 복음화와 민중 계몽을 위한 공공재였다. 특히 한영사전(한영자전)이나 지리, 역사 교과서의 출판은 교회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적 자산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⁷
- 토착화와 자립: 서회는 1919년 이후 한국인 총무 체제를 도입하며 점진적인 토착화를 이루었다. 이는 서회가 선교사들의 시혜적 기관에 머물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이 되는 '공교회의 자산'으로 전환됨을 의미했다.⁸

3.2. 설립 취지와 괴리: 기업화된 선교기관

오늘날 서회는 거대 출판사이자 임대업을 겸하는 기업형 법인으로 변모했다. 물론 자립 경영을 위해 수익 사업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논란은 '수단'인 수익 사업이 '목적'인 선교 정신을 압도한 주객전도의 상황을 보여준다. 1890년의 서회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값싸게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했다면, 2020년대의 서회는 "어떻게 하면 출판권을 독점하여 기득권을 유지할까"를 고민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이는 '성교서회(聖敎書會)'라는 이름에 담긴 '거룩한 가르침의 모임'이라는 정체성이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한다.

4. 경제적 이권과 성경·찬송가 출판의 정치경제학

사용자의 질문 중 핵심인 "성경이나 찬송가를 편찬할 때 경제적인 이권 문제는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답은 명백히 "그렇다"이다. 서회의 역사,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역사는 찬송가 출판권을 둘러싼 이권 다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1. 21세기 찬송가와 독점 출판권 분쟁

한국교회에서 찬송가와 성경은 단순한 예배 용품이 아니라,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1,000만 성도가 사용하는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 독점 체제의 형성과 균열: 과거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는 찬송가 출판권을 서회와

예장출판사 두 곳에만 부여하는 독점 계약을 유지했다.⁹ 이는 공교회 연합기관의 재정 안정을 돕는다는 명분이 있었으나, 실상은 시장 경쟁을 차단하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카르텔이었다.

- **21세기 찬송가 사태:** 2006년 《21세기 찬송가》 발간을 전후하여 공회는 일반 출판사(아가페, 성서원 등)에도 반제품 형태의 출판권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서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했다. 서회는 일반 출판사들을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법원은 "찬송가 반제품 공급은 적법하다"며 서회의 독점적 주장을 기각했다.⁹
- 공회의 법인화와 이권 다툼: 이 과정에서 찬송가공회가 충청남도에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며 서회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자, 서회는 이를 '사유화'라고 비난하며 공회 임원들을 고발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¹⁰ 겉으로는 '연합기관의 질서 확립'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연간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찬송가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경제적 셈법이 깔려 있었다.

4.2. 저작권료와 로열티 논란

《21세기 찬송가》 편찬 과정에서는 경제적 이권 개입 의혹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해외 로열티 급증: 새 찬송가에는 해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곡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로열티가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¹²
- 국내 작곡가 저작권 문제: 과거에는 헌신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던 국내 창작 찬송가들에 대해서도 저작권료 요구 소송이 이어졌다. 이는 찬송가 선곡 과정에서 음악적 완성도나 영성보다는, 저작권료 수익을 노린 특정 인맥이나 교단 배려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낳았다.¹²
- 소비자 부담 전가: 잦은 찬송가 교체와 저작권 분쟁 비용은 고스란히 개별 교회와 성도들의 찬송가 구매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공교회가 성도들을 상대로 '성스러운 세금(Holy Tax)'을 징수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5. 편집 방향성의 변천과 공교회와의 관계성 추적

서회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월간지 《기독교사상》은 한국교회 지성사의 흐름을 주도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교회와의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겪어왔다.

5.1. 민주화 시대의 예언자적 역할 (1970~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서회와 《기독교사상》은 진보적 기독교 지식인들의 산실이자 피난처였다.

- **민중신학의 발신지:** 서회는 안병무, 서남동 등 민중신학자들의 저작을 출판하며 한국적 신학의 토대를 놓았다. 이는 세계 교회에 한국 신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연대하여 인권, 민주화,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당시 서회의 편집 방향은 보수적인 교단 지도부와는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시대정신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광의의 공교회성'을 획득하고 있었다.¹³

5.2. 이념적 양극화와 교감의 상실 (2000년대 이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서회의 편집 방향성은 딜레마에 빠졌다.

- **보수 교단과의 괴리:** 한국교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예정 합동, 통합 등 보수 성향의 대형 교단들은 서회의 진보적 신학 노선(동성애 문제, 종교 다원주의 논의 등)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 서회 이사 파송이나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실질적인 압박으로 이어졌다.¹⁴
- **대중성의 약화:** 《기독교사상》은 전문적인 신학 담론에 치중하면서 일반 성도(평신도)들의 삶과 괴리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잡지의 구독률 저하와 영향력 감소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서회가 '일부 엘리트 목회자들만의 리그'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정치적 편향성 논란:**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이나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해 지나치게 진보적인 목소리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보수 교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서회를 '진보 진영의 기관'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¹³

6. 미래를 위한 제언: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로드맵

서회의 위기는 곧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위기다. 이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연합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세와 대안이 요구된다.

6.1. 거버넌스 혁신: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설립한 단체들은 무엇보다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임'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 **교단 파송 이사 중심 체제로의 복귀:** 현재의 기형적인 이사회 구조(은퇴 목사 중심의 회원 대표 이사 과반)를 타파하고, 각 교단 총회에서 직접 파송한 현직 이사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정관을 환원해야 한다.¹⁶ 이는 경영진에 대한 교단의 직접적인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한다.
- **상임이사 및 연임 제한 명문화:** 사장 및 임원의 임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퇴임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유급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 제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사유화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핵심 조치다.
- **외부 감사 제도 도입:**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같은 외부 감시 단체나 회계 법인을 통해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¹⁷

6.2. 본보기가 될만한 연합기관 및 모델 분석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서회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한성서공회 (Korean Bible Society): 전문성과 안정성의 모델

- **특징:** 성서공회 역시 이사회 중심의 연합기관이지만, '성경 번역과 보급'이라는 단일 목적에 집중함으로써 정치적 외풍을 최소화했다.
- **배울 점:** 철저한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록 총무의 장기 재임 논란이 없지는 않았으나¹⁸, 경영의 효율성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활용 면에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전문성'을 보여준다.

(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 도덕적 권위의 모델

- 특징: 막대한 자산이나 이권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다.¹⁹
- 배울 점: '이권'이 아닌 '가치'를 중심으로 연합할 때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회는 출판 수익이라는 이권 공동체에서 벗어나, 한국교회의 지적, 윤리적 수준을 높이는 가치 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

(3) **두란노서원 (Duranno):** 사적 소유이나 공적 기여를 하는 모델

- 특징: 온누리교회라는 개별 교회가 설립했으나, 콘텐츠의 질(Quality)로 한국교회 전체를 섬긴다.
- 시사점: 역설적으로 '공교회 기관'인 사회보다 '개별 교회 기관'인 두란노가 성도들에게 더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 이는 지배구조의 공공성만큼이나 ****콘텐츠의 탁월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가 생존하려면 '교단 안배'에 얽매인 낡은 콘텐츠가 아니라,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

6.3. 대표적인 문서사역 기관의 현주소

현재 한국교회 관련 문서사역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을 꼽자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성경 및 원천 소스: 대한성서공회 (압도적 점유율과 권위)
2. 신학 및 인문 교양: 비아(Via), 복 있는 사람, 새물결플러스 등 독립 기독교 출판사들이 사회의 역할을 대체하며 약진하고 있다. 이들은 교단 정치와 무관하게 독자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준 높은 신학 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3. 대중적 영성 및 큐티: 두란노 (《생명의 삶》 등)
4. 언론: 국민일보 (대형 교단들의 연합체적 성격과 대중성 보유)

사회는 과거의 독점적 지위(1, 2, 3번 영역 모두)를 잃어버리고 현재는 교단 정치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상태다. 사회가 다시 대표성을 회복하려면, 독립 출판사들의 기획력을 배우고 성서공회의 투명성을 이식해야 한다.

7. 결론

대한기독교서회의 사유화 논란은 한 개인의 탐욕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 연합 운동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다. 1890년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던 '조선성교서회'의 초심은, 막대한 부동산과 출판 이권을 둘러싼 잡음 속에 희미해졌다.

공교회가 설립한 기관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감시받는 권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교단 파송 이사 복원, 상임이사 제도의 영구 폐기, 그리고 재정의 투명한 공개만이 서진한 사장 체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사회를 다시 한국교회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연합기관들은 **카르텔적 연합**에서 **'미셔널(Missional) 연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권이 있는 곳에 까마귀가 모이는 법이다. 따라서 연합기관은 이권을 최소화하고, 섬김과

희생을 최대화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것이 130년 전, 자신의 삶을 바쳐 조선에 문서를 보급했던 선교사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며, 실추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1. 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및 재정비리 논란:한국 교회의 나침반 뉴스 ...,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www.newspower.co.kr/sub_read_amp.html?uid=59374
2. 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논란 : 교단/단체 - 기독교일보,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7011>
3. '사유화 의혹' 대한기독교서회, 경찰에 고발당해 [GOODTV NEWS 20240612] - YouTube,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xjryyz34MV8>
4. 기독교서회, 정지강 전 사장에게 6년간 총 5억여 원 지급 : 교계교단 - 필라한인,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philahanin.com/2023/09/15/98123/>
5. [정정보도] “개신교 연합기관 '기독교서회' 이상한 부동산거래...경영진 책임론” 관련 - 여성신문,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587>
6.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EC%A1%B0%EC%84%A0%EC%84%B1%EA%B5%90%EC%84%9C%ED%9A%8C#:~:text=%EC%A1%B0%EC%84%A0%EC%84%B1%EA%B5%90%EC%84%9C%ED%9A%8C\(%E6%9C%9D%E9%AE%AE%E8%81%96,%EC%98%AC%EB%A7%81%EA%B1%B0%EA%B0%80%20%EC%B4%88%EB%8C%80%20%ED%9A%8C%EC%9E%A5.](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EC%A1%B0%EC%84%A0%EC%84%B1%EA%B5%90%EC%84%9C%ED%9A%8C#:~:text=%EC%A1%B0%EC%84%A0%EC%84%B1%EA%B5%90%EC%84%9C%ED%9A%8C(%E6%9C%9D%E9%AE%AE%E8%81%96,%EC%98%AC%EB%A7%81%EA%B1%B0%EA%B0%80%20%EC%B4%88%EB%8C%80%20%ED%9A%8C%EC%9E%A5.)
7. 민족과 역사를 같이한 '대한기독교서회'의 130년 - 투데이N,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www.todayn.net/news/articleView.html?idxno=82641>
8. 대한기독교서회(大韓基督教書會)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954>
9. 저작권법상 '출판'의 의미가 문제된 찬송가 출판권 분쟁에서 승소 - 법무법인(유)광장,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www.leeko.com/leenko/news/workHistoryView.do?lang=KR&boardNo=14318>
10. 기감 "21세기 찬송가 구매중단"이 갖는 의미 - 예장뉴스,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8>
11. 찬송가 논란 교단장협과 찬송가공회 분쟁으로 - 크리스천투데이,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184332>
12. '찬송가 사태' 해법은 없나... “피해는 결국 성도 몫, 법인 찬송가공회가 결단 내려야” - 국민일보,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108570>
13. [특집 / 진보와 보수, 네 이름을 묻는다] 기독교 진보진영, 접혀진 날개를 추스리고 - DBpia,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669300>
14. 한국교회언론회, “거자씨크리스찬스쿨 등록 취소는 이념적 프레임 공격” - 복음기도신문,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gpnews.org/archives/220704>
15. 개신교/대한민국/논란 - 나무위키,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A%B0%9C%EC%8B%A0%EA%B5%90/%EB%8C%80%ED%95%9C%EB%AF%BC%EA%B5%AD/%EB%85%BC%EB%9E%80>

16. "기독교계 이사 축소 정관개정 유효" - 아이굿뉴스,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642>
17. [심증기획④]-한국교회 연합, 다시 길을 묻다] 기독교와 불투명, 연합을 갉아먹다,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www.newsn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96>
18. 성서공회 이사회, 김호용 총무 임기 1년 연장 - 뉴스앤조이,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541>
19. [기윤실 성명서]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www.theosnlogos.com/924>
20.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명서] 청렴에는 예외가 없다 - 기독교일보, 12월 31, 2025에
액세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73735>